

이주민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몰라서’ 놓친다

30대 카자흐스탄 이주 여성 A씨는 몇 주 전 두살배기 아이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접종 비용은 3만5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보건소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 이주민 영유아들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보·홍보 부족과 언어 장벽, 보건소 접근성 문제 등으로 무료 접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국가예방

홍보 부족·언어 장벽·정보 단절 등 접근성 부족

필수예방접종률 55.2% 수준…적극적 홍보 필요

접종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18종의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결핵과 A·B형 간염, 파상풍, 백일해, 인플루엔자, 홍역 등 13개 항목이 주요 대상이다. 이 지원은 외국 국적 영유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마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내역 관리를 위한 ‘임시관리 번호’를 발급받으면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주 외국인이 많아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이주민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이주민 영유아 건강 실태조사’에서 1세 이주민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에 불과했다.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4%)과 비교하면 41.2% 낮은 수치다. 2세 이주민 영유아의 접종률도 66.7%에 그쳤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가 8.3%, ‘언제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가 19.3%, ‘정보가 없어서’가 3.6% 등 정보 부족이 31.3%나

됐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8.3%였다.

무료 접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 자치구는 이주민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 없이 지역 내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통합 안내를 하고 있다.

생후 1년 이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는 우선으로 임시관리번호 발급을 안내하거나 문자로 접종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은 전달 체계 취약 등 지역적·구조적 한계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농업과 산단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은 탓에 정보 접근성이 더 떨어지고, 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아울러 다국어 홍보물, 통역 지원, 현장 상담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라도 일부 지역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민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웹사이트 안내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한 맞춤형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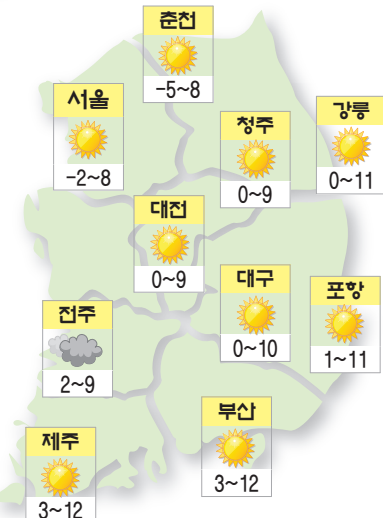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선택 접종 백신을 맞거나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민들은 필수예방접종 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임신·출산 시 병원에서 받은 정보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정보 단절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7:11	달림	06:08
맑음	17:24	달림	16:26



광주		3~10
목포		5~11
여수		5~10
순천		2~11
구례		2~10
광주		2~12
임도		4~12
전남		8~12
고흥		1~12
진도		5~11

목포	미물(고)	01:09 / 13:52
	샘물(저)	06:32 / 19:08
여수	미물(고)	08:34 / 20:25
	샘물(저)	01:54 / 14:35

지방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14명 송치

〈속보〉지방의회의 해의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본보 7월29일 5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 기초의회 3회에 대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최근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1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국의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여행사관계자 9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총 1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의원 국의 출장 과정에서 항공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 청구하고, 차액을 다른 경비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청은 지난 8월29일 오전 국의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 서구, 광산구의회 사무국 3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청은 당시 사무국 사무실에서 국의

출장을 담당했던 직원의 컴퓨터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 혐의 입증에 위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예산 투명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 해의 연수가 필요한 제도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2024년 5월 까지 전국 지방의회의 국의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 등으로 경비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지친 마음에 행복을 처방합니다’ 공직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을 위해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행복약국’을 찾은 직원들이 타로상담을 하며 웃음 처방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동구도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된다

73곳 4890점포…지역 소비 선순환 기대

광주 동구가 서구, 북구에 이어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나선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난 12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동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총 73곳 4890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동구 전 지역에 은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졌다.

현재 동구 내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은 3350여개소이며, 은누리상품권은 QR코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동구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지역화폐 ‘광주 동구랑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구랑페이 가맹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27일에는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각 골목형상점가 대표들을 초청해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서는골목형상점가대표들에게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임택동구청장이 소상공인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 전역 골목형상점가 73개소 지정은 지역 상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은누리상품권과 동구랑페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목격자 행세한 뺑소니범 ‘유죄’ 판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해놓고 도주하고 병원 측에 목격자 행세를 한 50대 뺑소니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전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5시30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B씨(8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판단했다.

장전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했음에도 신원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후 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경찰서 등서 난동 피운 50대 여성 징역 2년

광주 일선 경찰서에서 난동·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강요,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스토킵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모욕, 절도,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킵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10시49분 광주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2명에게 각종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민원인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장에게 민원을 넣어서 해고

되게 하겠다”며 행패를 저질렀다.

지난 7월17일에도 경찰서 지하 구내식당에서 애호박볶음 등 ‘반찬이 맛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조리사들을 폭행할 것 처럼 위협했다.

이러한 A씨의 소란에 경찰관들은 약 10분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했다.

A씨는 지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스토킵 강요,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인들을 상대로도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려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공모 대상에 ‘국립 남도대학교’

양 대학 구성원 투표·통합추진위 심의 거쳐 교명 확정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교명 공모에서 ‘국립 남도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다.

18일 두 대학에 따르면 통합 대학명 공모전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 국민 공모와 학내 구성원 공모로 나눠 진행됐다. 선정 기준은 정체성, 대중성, 차별성, 확장성, 상징성이었다.

국민을 대상으로 교명 공모에서는

‘국립 남도대학교’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국립 전라대학교’와 ‘국립 전국대학교’, 우수상은 ‘국립 하나대학교’·‘국립 글로벌대학교’·‘국립 목포순천대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순천대 학내 구성원 공모에서도 ‘국립 남도대학교’가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국립 전라대학교’와 ‘전남 국립대학교’, 우수상에는 ‘전남

통합 국립대학교’·‘국립 전국대학교’·

‘국립 하나대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목포대 학내 구성원 공모에서는 ‘국립 전라대학교’가 대상, ‘국립 김대중대학교’와 ‘국립 목포순천대학교’가 최우수상, ‘국립 전국대학교’와 ‘국립 전남과학기술대학교’가 우수상에 뽑혔다.

대학통합공동추진위는 오는 21일 2차 후보군으로 4건을 선정할 뒤 양 대학 구성원 투표와 통합추진위 심의를 거쳐 교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순천·백정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누범기간에 폭행 50대 실형

마네편 ○···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을 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일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전수 재판장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을 판결.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1시 25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공원에 있던 피해자 B씨(53)의 뺑을 때리고, 알부마눔 소재의 지팡이를 무릎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씨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다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비취벌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목욕탕서 금품 훔친 50대

생활고로 범행…구속영장

광주 도심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은 타인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광주 서구 유촌동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도구를 이용해 사물함을 파손한 뒤 고가의 시계를 비롯해 현금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8시에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A씨를 바스타미널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용성 기자